

우리나라 공간환경과 한국형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필요성

하미경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우리나라 공간환경과 범죄예방환경설계

밝고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주변 곳곳에는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곳이 너무나 많고, 지나다니기가 두렵다.

기존에 설치된 곳곳의 방범등조차 에너지 절약을 핑계로 혹은 관리 부재로 점등하지 않아 골목길·아파트·학교시설 등이 어두운 경우가 많다. 또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의 관심을 끌고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도쿄 우에노역 부근 도로조명 개선에 의해 범죄 발생이 감소하였고, 우범지대였던 뉴욕 브라이언트 공원은 조명환경 개선과 공간 재정비를 통해 마약사범이 사라지고 주변 직장인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신하였다. 또한 상점 보안의 자연스러운 방법은 ‘깨끗하고 밝은 상점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처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란 누구나 좋아하는 환경이고, 조성하기 힘든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급속한 고령화나 심각한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사람 간의 대면 소통보다는 SNS에 의한 관계 증가,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중심사고 증가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대 간, 젠더 간, 경제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낳는다. 또 이러한 사회 전반적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도시·주택·사무실·상가·공원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사용과 의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낙후 환경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개발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은 개발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간과되어 왔다. 이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가능한 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려는 시점에 와 있다. 비록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세우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놓쳤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을 정책목표로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변모시키며,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개선 방향에 있어서 ‘범죄로부터의 안전’ 또한 작지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 <http://www.city.go.kr/portal/policyInfo/newDeal/contents01/link.do> 참조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는 1960년대 미국의 여성 저널리스트인 제인 제이콥스가 제시한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이콥스는 당시 뉴욕시가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자동차 중심으로 계획하여 기존 주민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개발의 결과로 기존 주민들의 공동체적 생활근거가 사라지고, 그동안 이웃 교류에 의해 지원되던 안전망이 사라지는 냉랭한 지역사회, 위험한 사회를 경고하고 반기를 들었다.

도시의 쇠락은 범죄를 증가시키고, 범죄의 증가가 도시의 쇠락을 가속화한다. 무질서와 범죄의 온상이 되어 1972년 결국 파괴된 세인트루이스의 공동주택(Pruitt Igoe)을 포함해 당시 개발에 의한 물리적 환경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디자인의 결과물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였다. 아울러 물리적 환경이 시민들의 정신과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잠재적 범죄를 억제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범죄학자 레이 제프리(1971)의 ‘셉테드(CPTED)’, 환경심리학자 오스카 뉴먼(1972)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이론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환경범죄학을 주창한 브랜팅햄 부부(1981)는 장소를 범과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중요한 범죄원인으로 보았으며, 윌슨과 켈링(1982)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방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고, 도시 건축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을 가져왔다.

CPTED는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지만, 초기 이론은 물리적 환경으로 가시성과 영역성을 강화하고 범죄자에게 범행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여,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욕구를 없애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세빌과 클리브랜드(1997)가 제시한 후기 CPTED 이론은 장소적·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 범죄예방의 전략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의 사회적 복잡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범죄예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2015, pp.3-24)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도입과 발전

우리나라에 CPTED에 대한 개념과 기법은 1980년대부터 도시 건축 디자인 분야의 학자들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히 연구된 시기는 2000년에 이르러서다. 모 건설사의 아파트 광고에 ‘CPTED’라는 단어가 등장한 시기도 이 무렵이다. 당시 CPTED는 제대로 개념조차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적으로는 1992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의 ‘방법설계를 위한 지침’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법률적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주택법」 제4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부분적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 「건축법」 제53조 제2항에 ‘건축물의 범죄예방’이 추가되고,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범죄예방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해당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건축 환경에 적용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침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2009),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지침’(2009) 등을 시작으로 2018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16곳, 기초자치단체 176곳에서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한 2013년 서울시의 ‘소금길’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이후 지역재생사업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초기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조명이나 CCTV의 설치 또는 교체와 같이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사업과는 다르게 최근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은 특정 구역(주로 행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7월 24에 일부 개정되어 2019년 7월 3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2015, pp.60-68)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관련 조례명은 ‘범죄예방’이라는 용어와 함께 ‘도시디자인’, ‘환경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환경설계’, ‘도시환경 설계’,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정동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치조직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범죄안전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행 지역의 문화·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콘셉트로 관련 사업들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관악구 행운동은 여성 1인가구를 고려한 ‘안심’, 중랑구 면목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역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미담’, 용산구 해방촌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아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과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종로구 행촌동은 지역을 대표하는 물리적 환경인 ‘서울성곽’을 모티브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안전한 동네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32곳에 적용하고 있고, 향후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 등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CPTED 사업은 단순히 ‘범죄안전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범죄 두려움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서 지역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된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학문적 관점과 행정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기존의 문헌적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정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포함하여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과거에 추진되던 단기적이고 행정홍보용 CPTED 사업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간복지를 확보하는데 기본’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과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한국형 CPTED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났으며 700년 된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아침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침에 서구화된 공간에서 눈을 뜨고, 우유를 마시고, 차

* 변기동(2018, pp.20-23)

를 타고 출근한다. 즉 우리의 일상이 다른 나라들에서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호하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진다. 물론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물리적 환경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인간·환경·사회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의식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CPTED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 및 실행 과정에서 여러 연구자와 관계기관의 노력을 통해 서구의 이론이나 실행지침이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형 CPTED’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아마도 한국형 CPTED는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변화의 방향에 나침반을 맞추고, 그러한 ‘한국형 유토피아’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몇 가지 방향을 짚어 본다.

양극화의 해소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 탈중심화, 탈주체화에 따라 과거 공동체가 소멸되고 개개인이 파편화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소통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양극화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적으로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현상이 근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기초단체 간, 광역단체 간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국가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자 권리인 ‘안전’의 여건마저도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환경은 부유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지역의 소득차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인프라 관리뿐 아니라 ‘깨진 유리창’과 같은 방치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재생·건축재생과 지역사회관리를 위한 정규적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범죄안전문제에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예산 투입이 중요하다.

모든 공간환경에서 범죄안전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CPTED의 개념을

거의 모든 규모의 주거 및 시설계획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의 욕심과 디자이너들의 사려 깊지 못한 설계로 만들어지는 후미지고 으스스한 공간들은 우리 도시, 학교, 쇼핑몰, 주거단지, 공원 곳곳에 수많은 존재한다.

초·중·고 학교시설에서 창 있는 복도나 문,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계단실, 교사실 등의 위치 선정과 디자인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범죄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심은 수목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좋은 은신처를 제공하고 희생자를 만든다. 자연감시가 가능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건물로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조경, 시선 차단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녹음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창을 통해 공간의 개방감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외부 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 낮은 관목과 조화를 이루는 투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담장, 도난·성폭행·침입범죄를 막을 수 있는 오피스건물, 도난·갈취를 예방할 수 있는 쇼핑센터까지, 모든 시설계획에서 사려 깊은 디자인 적용은 상당 부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간복지 차원이라고 해서 지자체, 지역사회, 혹은 단지 내 건축물 내부나 외부에 제공되는 감시력이 전혀 없는 애매한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 되기 쉬우므로 이런 공간을 제공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걷고 싶은 길, 안전한 가로 조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동네를 안전하게 만드는 도로의 눈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과거에 조성된 많은 대규모 주거단지는 너무 외지고 걷기 싫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두려운 길을 만들어 왔다. 사람의 왕래가 있는 거리로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장원·양장점·빵집·세탁소·카페·분식집·편의점들이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가로 친화적 단지 조성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다. 도시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로를 살리는 뉴욕의 액티브 디자인 정책에도 꽤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거리는 갈수록 폐쇄적인 황량한 도로로 변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과도한 안전펜스 설치로 보도와 차도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노상주차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통학 등 안전펜스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길에서 차를 세우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 힘들다. 도심에서도 차만 뿡뿡 달린다. 주차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도로에서 짐을 실거나 내리거나, 사람을 기다려 태우거나 할 수 없다. 결국 갈수록 쇼핑은 주차장이 완비된 대형 쇼핑몰에서 하거나, 주문과 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시구조를 만들고 있다. 도로에 차와 오토바이만 달리고, 보도에서조차 사람이 사라진다.

보도의 통행자에게는 무심한 환경, 고속도로도 아닌데 달리는 차만 있는 도로를 피하고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있도록 거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할 하나의 방안으로 노상주차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고 싶다. 외국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길가에 시간 단위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노상주차의 허용은 지역사회의 상권을 살릴 뿐 아니라 도시의 죽은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과 생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 걷고 싶은 길, 따라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길로 조성되어야 한다.

통합적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매년 법무부가 지원하고 한국셉테드학회에서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CPTED 교육’ 같은 예가 있다. 피교육 대상자를 건축 도시 환경 디자이너, 경찰관, 일선 공무원, 방법 관련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CPTED는 사려 깊은 디자인을 하도록 디자이너를 교육하는 것이 기본사항이다. 도시 건축 환경 디자이너들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교육을 통해 프로젝트 디자인 초기부터 기본개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연구의 결과는 디자이너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CPTED 정책이 건축물의 에너지정책, 소방정책, 무장배 정책 등과 상호 충돌되는 점이 있다는 불평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 해결안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CPTED의 도입이 새로운 디자인 규제가 아닌, 결과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환경디자인 관점에서의 상호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또

과도한 법적 제재로 디자인을 위축시키거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편 일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CPTED 정책이 디자인 검열 차원으로 오인되어 공간환경 디자이너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만드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CPTED는 경비가 많이 드는 과도한 기계적 감시를 포함한 여러 보안시설이나 장치의 설치를 요구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감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테러에 대비한 건물과 환경디자인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CPTED의 범위가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테러에 대비한 대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울리히 벡(1986)이 경고한 ‘위험한 사회’에 사는 우리는 적국의 공격뿐 아니라 동 사회 구성원의 테러에 의한 일상적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글로벌 경제에 의한 사회구성원의 복합화와 사회적 양극화, 개인주의, 고립감까지 팽배한 우리 사회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테러리스트 출현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 그 결과의 참담함과 파괴력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공공기관, 대형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 시 테러에 대비하는 환경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2015).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 한국셉테드학회·부영사.
- 2 변기동. (2018).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국민복지’. 건설기술인, 148.